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근절 정부, 1000여 곳 점검 추진

정부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 문제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1000여 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후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도 주안점을 두고 진입·운영·제재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고용부는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해 신규기관으로 가장한 채 사업에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자 자기가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교개로 작성하도록 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범 위반기관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습적 범 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이나 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모든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을 부과하는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가상화폐 규제 높이는 정부

글로벌 추세 역행, ‘갈라파고스’ 되나

세무조사·거래소 폐쇄 등 압박 美코닥, 가상화폐 발행 추진 등 세계선 기술활용방안 모색나서

정부가 연일 가상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법도박 혐의 조사와 세무조사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강하게 언급하고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투기판으로 시작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위상은 달라졌다. 제도권 투자상품은 물론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개발을 시작하는가 하면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기업도 나왔다.

◆ 정부, 가상화폐 시장 전방위 압박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으면 검토하겠다는 것을 넘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거래소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무게가 달라졌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한 것도 그래서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800만원까지 하락하며 전일 같은 시간 대비 20% 가량 급락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등은 하락폭이 30% 안팎까지 더 확대됐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

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산업자본화 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를 위한)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폐지 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도 없다”며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그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부작용 없애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전일 국내에서 거래규모가 큰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불법 도박으로 보고 코인원을 조사 중이다.

◆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

정부가 연일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로 사행화되면서 역

효과가 나타났다. 박 장관 역시 “(가상화폐의) 개인 대 개인(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국내와는 정반대다. 투기나 가격거품 논란이 전부였던 데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혁신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 필름·카메라회사인 코닥은 이달 말에 가상화폐인 코닥코인을 발행한다. 사진 구매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코닥코인을 쓰도록 하면 불법 다운로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신저 텔레그램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가상화폐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스웨덴, 이스라엘 등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가상화폐의 개발과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한국이 ‘갈라파고스 규제’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단절되어 동·식물 구성을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변화하는 국제경제와 동떨어진 특정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한줄 News

정치·사회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 대학가는 해외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다른 대학생들의 전공과 아이디어를 살리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

▲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노사와 대한항공 노사간 갈등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

▲ 삼성전자 전자용 세탁기 액티브워시가 스테디셀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이 앞다투어 국내 IT 스타트업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부동산·마켓

▲ 시중은행의 여신부가 기피부서가 됐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은행채를 찍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시중 은행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즐기고 있다.

▲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이 2018년 전략과제로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제시했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액을 1조원까지 확대해 중기특화증권서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올 3월까지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5607가구의 아파트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7116가구 대비 21.2% 감소한 수치다. 부산은 증가했지만 광주, 울산 등은 크게 줄어든다.

유통·라이프

▲ 2018년 황금 개피 해를 맞이해 유통업계가 강아지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롯데그룹이 롯데건설, 롯데로지스틱스 등 건설·서비스 및 기타 부문 11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 내달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보완대책

‘안전망 대출’ 1조 공급... 300만명 혜택 기대

정부가 오는 2월 8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만기압박 대출자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의 경제재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 억제에 위해선 범부처 간 일체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벌금을 6배 상향한다. ‘몰라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 상환능력 있으면 대환대출, 없으면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27.9%) 및 사인간 금전거래 시 최고금리(25.0%)를 24.0%로 인하,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및 무분별한 대출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293만명의 저신용 차주가 연간 약 1조 1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

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최준우 정책관은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이 다소 부족한데 기존의 정책상품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계층을 위해 새롭게 만든 상품”이라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4~27% 금리로 대출을 받던 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중에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다.

공급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이며,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 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토록 한다. 대출 성실상환자는 통상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6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남북경협 30주년... 갈등 회복위해 공감대 조성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과제·시사점

새해 복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시사해 남북 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까지 이어졌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 경협 회복을 위한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과 국민·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11일 연구원이 남북경협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신(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다각적인 남북경협 로드맵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선 남북경협의 경제적 기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조성이 필수라고 제시했다. 남북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토론과 소통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장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은 30년이 됐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천안함 사건, 개성공단 폐쇄로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다. 남북 핫라인도 지난 10일에서야 재가동 될 정도로 소통이

단절됐다. 회담 횟수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남북 경협 성장기인 1998년부터 2007년에는 무려 251건이 이뤄졌지만 2008년부터 올해까지는 겨우 58건에 그쳤다.

이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 경제 강국을 이루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연구원은 남북 모두 유사한 개발 계획을 비교했다. 우리 정부가 10대 국정 과제에 뽑은 ‘H 경제 벨트’와 북한이 발표했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이다. 두 구상 모두 동해권, 서해안을 양대 축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남북이 장기적 협력 확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임현재 기자 ih@